이슈 2

최근 건설산업 ESG 동향과 2023년 전망

에너지 위기, EU 택소노미 채택 등 ESG 이슈 지속 확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는 노르트스트림 등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가동을 중단하면서 가스 공급 제한이라는 조치를 단행한 상황으로 기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 대책을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음.
- 에너지 위기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에너지 요금을 중심으로 한 유럽 물가 급등이 있음. 영국 중앙은행이 2022년 10월 밝힌 영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유럽 곳곳에서는 고물가와 사회 불안정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 연료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에너지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져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2022년 7월, 유럽연합(이하 EU) 의회는 원자력, 천연가스를 친환경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택소노미(taxonomy :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채택하였고,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본격적인 투자를 골자로 하는 「인플레이이션 감축법(IRA)」을 발표하였음.

- EU 택소노미는 환경 및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목록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투자(녹색 금융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택소노미가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강제로 제한하는 요건은 아니지만, 여기에 속하는 경제활동은 정책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큼.
- IRA의 골자는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만 3,690억 달러를 배정함.

해외 주요국, ESG 정보공시 제도화 급속히 진행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에 있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는 2022년 3월,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의견수렴 과정 중으로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음.

- IFRS 공시기준은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지표 및 목표에 중점을 두어 공시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공시를 내용으로 함.
- IFRS 재무보고 기준을 따르고 있는 한국에서는 ISSB가 추진 중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채택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어서 미리 공시를 위한 데이터 확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2022년 11월,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이 독자적으로 만든 ESG 정보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이 발표되었음.

- ESRS는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근간으로 하여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영향과 기회 및 위험에 대해 보고하는 규칙과 요건을 담고 있음.
- 환경기준인 ESRS E1(기후변화), ESRS E2(오염), ESRS E3(수자원), ESRS E4(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E5(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등 다섯 가지와, 사회기준 ESRS S1(자체인력), ESRS S2(가치사슬의 직원들), ESRS S3(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ESRS S4(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등 네 가지, 지배구조는 당초 ESRS G1(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가 삭제되고, ESRS G2(비즈니스 수행)만 남게 되었음.

◎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22년 3월,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하여 표준화된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 공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기후 관련 공시 내용으로는 ① 이사회 및 경영진의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감독 및 거버넌스 정보, ② 기후변화가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영향, ③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 ④ 온실 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등임.
- 또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①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조건, 전환 활동이 재무제표 관련 항목에 미치는 영향, ②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조건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지출 및 전환 활동 관련 지출, ③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조건, 전환 활동이 각 재무제표 추정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 ④ 재무제표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등을 공시토록 함.
- 이에 따라 이미 미국에 상장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에서 자금조달 및 상장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기후 공시 의무화에 관한 대비가 필요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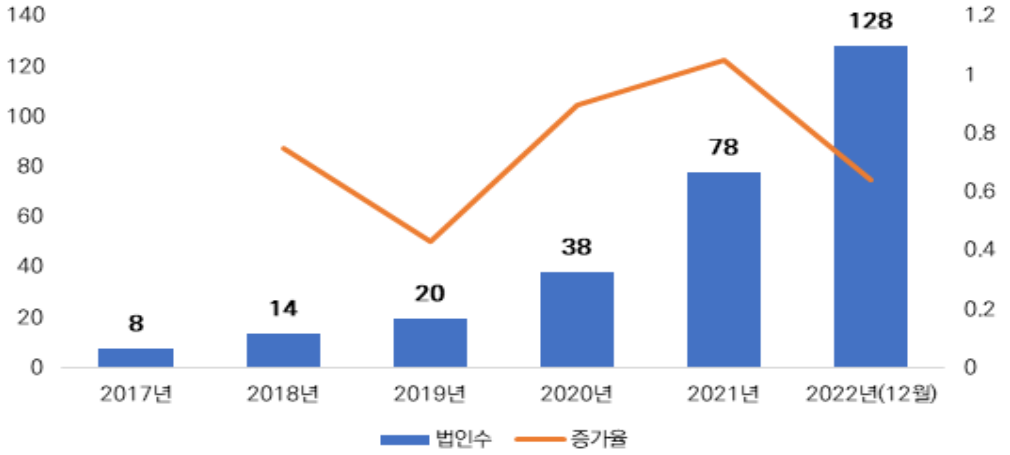
국내, ESG 정보공시 관심 증대 및 ESG 금융 지속 성장

◎ 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한 기회·위험요인 등을 공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법인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한국거래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자율적으로 실시한 기업이 2021년 78개 사에서 2022년 128개 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시 기업 현황을 보면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법인이 113개 사로 88%에 이르고 있고,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72%가 공시했으나, 시가총액 1조 원 미만 기업은 6% 만이 공시한 상황임. 이는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는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기에 기업이 사전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자율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는 2021년 이후 폭등하여 2022년 상반기 현재 전체 상장기업 792개 사 중 188개 사(23.7%)가 설치한 상황이며, 2022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41개가 신설됨.

-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은 주로 2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6월 현재 존재하는 189개의 ESG 위원회 중 2021년 이후 신설 또는 확대·개편된 위원회가 175개이고, 2022년 한 해에만 신설된 ESG 위원회가 41개에 달하는 상황임.
- 현재 이사회 내 ESG 위원회는 운영 초기 단계로서 ESG 경영을 활발하게 실행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 것으로 보임
- ESG 위원회의 주요 안건 내용을 각각 ESG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ESG 공통 안건이 48.74%로 절반에 가깝고, 지배구조 관련 안건이 21.83%로 그 뒤를 잇고 있음. 지배구조 안건 330건 중 내부거래 관련이 205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안건 대비 비중 역시 13.56%로 높음. 내부거래 안건은 이사회 결의가 의무화된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등이 다수 차지함

◎ 금융위원회가 2021년 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래, 정보공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구체적인 공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임. 2023년부터 ESG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할 예정임.

- 금융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이전까지는 자율공시이지만,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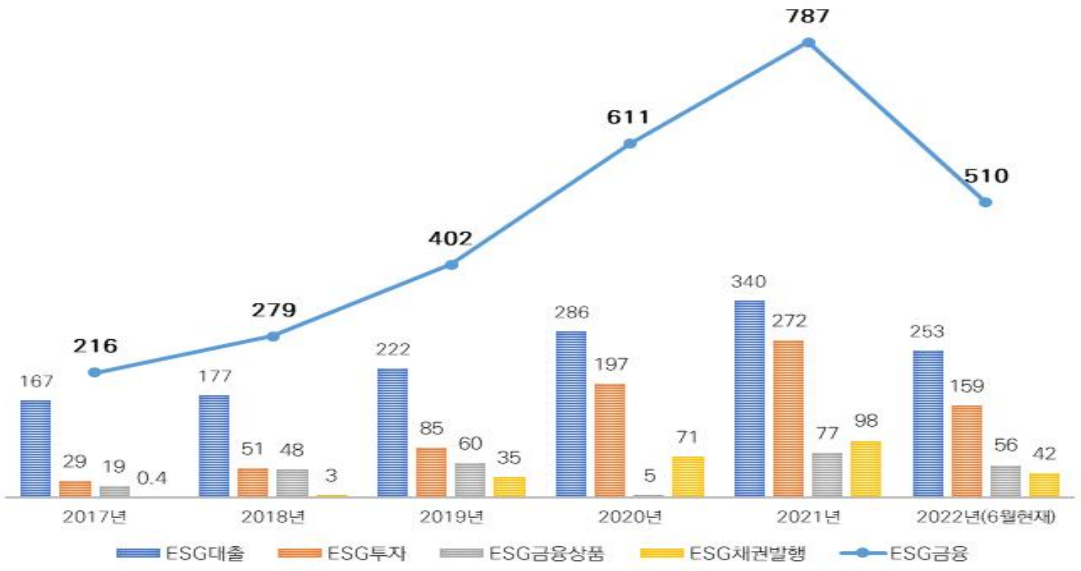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코스피 모든 상장사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임.

- 한국거래소도 2017년 3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고, 2019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조 원 이상, 2024년에는 5,000억 원 이상, 2026년에는 전 코스피 시장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임.
- 2023년 1월부터 가동되는 KSSB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됨.

◎ 2021년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787조 원으로 최근 5년간 39% 증가한 상황임. 2022년의 경우, 6월 현재 510조 원으로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의 영향에도 불구, 견실한 성장을 지속 중임.

- 2021년 기준 787조 원에 달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ESG 금융 규모는 전년과 비교하면 29% 성장한 결과임. 유형별로는 대출 340조 원, 투자 272조 원, 금융상품 77조 원, 채권발행 98조 원임. 모든 ESG 금융 유형은 2020년 대비 최소 15% 성장(대출 19%, 투자 38%, 금융상품 37%, 채권발행 38%)하였음.
- 이 중 공적금융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연금의 규모가 전체의 68%를 차지함. 민간금융은 은행섹터가 전체의 70%를 차지함.
- 전체 ESG 금융에서 공적금융은 전년 대비 16% 성장한 반면, 민간금융은 42% 성장하였음.

〈그림 2〉 ESG 금융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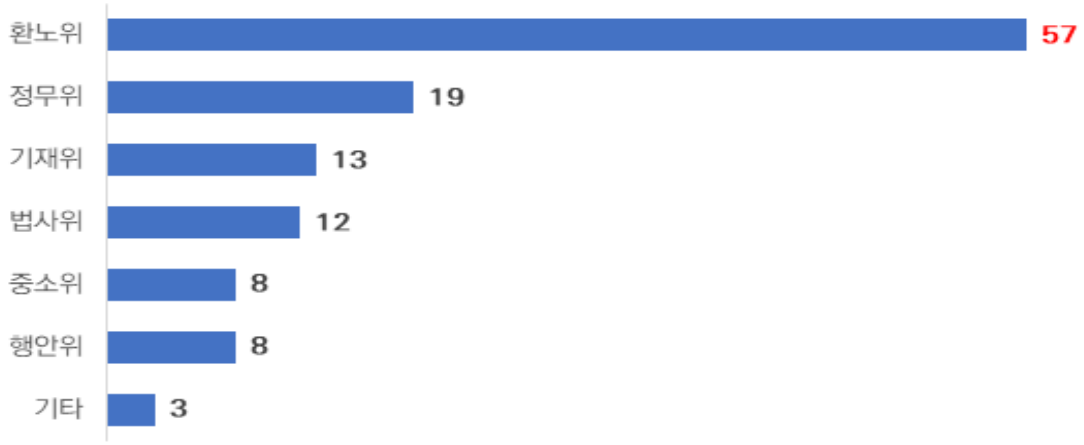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국회의원 이용우(2022). “2022 한국 ESG 금융백서”.

2023년, 환경·사회 분야 본격 성장 및 업종별 ESG 이슈 부상

◎ 2023년에는 지금까지 ESG 분야 중 가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환경 관련 이슈가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되며, 더불어 사회 분야의 주요 이슈가 크게 부상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말 기준으로 국회 출범 이후 국회 소관위별로 ESG 관련 법안의 발의 건수를 보면, 전체의 50% 가까이가 환경, 노동 관련 이슈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임.

〈그림 3〉 국회 위원회의 ESG 관련 법안 발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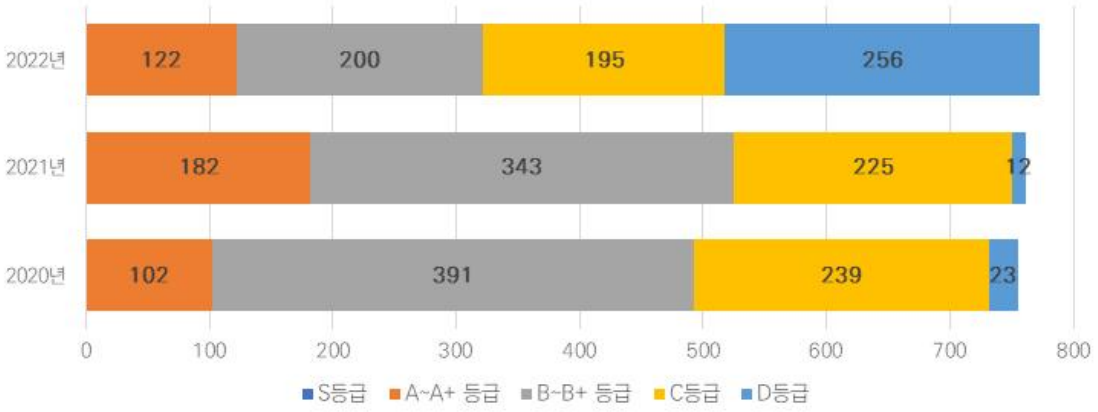
자료 : 2022 글로벌 ESG 포럼(2022.8), "ESG 상생 성공사례", 대한상공회의소.

-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탄소중립 관련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완료되었고, 2023년 이후부터 '사전 영향 평가 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방안들이 실시될 예정임.
- 이와 함께 최근 EU 등 해외 각국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인권 대응, 산업안전 관리, 공급망 ESG 지원 등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2023년에는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본격 시행되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임.
- 또한,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내에서도 「인권정책기본법」이 나왔고, 한국 버전의 「K-공급망실사법」도 초안이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어, 사회 분야에 대한 ESG 기준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전망임.

◎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2년도 ESG 등급을 보면, 2021년 대비 등급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평가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엄격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 지배구조 분야 평가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ESG 정보공시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2023년 ESG 평가 및 등급 산정 관련 이슈의 급성장이 예상됨.

- KCGS의 773개 사에 대한 2022년 ESG 등급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A~B등급의 기업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반면, D등급 업체는 12개 사에서 256개 사로 대폭 증가함.
-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개정된 모범규준을 평가모형에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평가기준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고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음을 잘 보여줌.
- 세부적으로 보면, 환경 부문에서의 평가는 변화의 폭이 작았으나, 지배구조, 사회 등의 부문들의 평가가 크게 떨어져 전체등급을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이는 그동안 환경 이슈가 크게 부상하였다면, 현재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로 확장되고 있는 양상이고,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그림 4〉 KCGS의 ESG 등급별 현황



자료 : ESG 포럼, KCGS.

◎ 주요국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ESG 관련 정보공시 특히, 사회 및 지배구조 분야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의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는 ESG 경영 확산과 산업 차원의 준비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한 ESG 및 기후변화 관련 사항]

1. 민간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 ESG 경영 : 국내 ESG 공시체계 정비 및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

○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 국제표준·국내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 정비

- KSSB(회계기준원내 산하기구) 설립 등을 통해 ESG 공시기준 및 검증 관련 국제기준 논의대응 ·규율체계 마련 등 추진 →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법령 개편방안 검토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 구체화, 컨설팅, 우수기업 지원 등 추진

□ ESG 투자 : 녹색분류체계를 개선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22.12.)하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적프로젝트 범위·사례·예시, 워싱 방지 등을 위한 사전·사후보고 체계 등 제시

○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 기여도를 반영하는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

□ 인프라 구축 :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인력 양성

○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 검토

□ 추진체계 :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기재부 차관 주재) 구축

2.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 기본계획 :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23.3.) 및 10대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CCUS, 수소, 국외감축 등 10개 부문

□ 배출권거래제 : 배출권 조정방향·할당방식 등 포함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조기 수립* 추진('23.下)

○ 법상 수립기한('24년 말) 대비 1년 앞당겨 추진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배출권 제3자 시장참여 단계적 확대, 거래형태·상품 다각화* 추진

* 증권사 위탁거래 도입,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 검토

□ 핵심기술 :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무탄소전원 등 산업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감축 기술 R&D 지원

○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23~'30년간 9,352억 원), CCUS 기술 상용화('23년 942억 원) 등

□ 산업단지 : 산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저탄소 전환* 추진

* 친환경 에너지 보급,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산단 구축(~'27년 15개)

□ 신무역장벽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26.) 전까지 EU 협의 강화 및 철강 등 업계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 마련('22.12.)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EU內 수입업자에게 수입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구매 등 부담 부과 제도

○ 탄소 배출 측정 및 검인증 기반 강화, 배출량 산정 DB 구축, 탈탄소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장단기 대응전략 마련

- 2023년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에게 적용하게 될 공시지침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ESG 정보공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ESG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진전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ESG가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 기준들이 각각 업종별로 구체적인 이슈 및 주제로서 다루어질 전망임.

- 글로벌 ESG 기준이 지속 상향되고, 스코프(Scope) 3[1]와 LCA(전과정)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ESG 등급이 크게 하향될 가능성이 큼. 2023년에는 ESG 경영에 소극적이거나 리스크에 단순 대응하는 기업들과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의 본격화 등 환경, 사회 부문 규제의 본격화와 ESG의 확산에 따라 업종별로 관련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대응 활동의 방향 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의 추진 유도 및 산업 단위의 적극적인 ESG 대응을 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의 마련에 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2023년, 건설산업 내 ESG 대응 이슈 본격 성장 전망

◎ ESG 관련 이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 상대적으로 금융, 제조업 등에 비해 ESG에 관한 관심이 적었던 건설산업에 있어 2023년부터는 ESG가 본격적인 이슈로 부상할 전망임.

- 국내외의 ESG 정보공시 제도화 움직임과 환경규제의 강화, 인권 및 가치 경영,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 사회적 책임 등 사회 이슈의 부상,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충실도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각종 ESG 관련 이슈의 부상에 있어 건설업도 예외는 아닌 상황으로 건설산업과 관련된 환경, 사회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임.

◎ 2023년 건설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칠 분야는 환경으로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환경 관련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9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는바, 건설 분야의 영향도 불가피함.
-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건설산업과 관련된 산업, 건물, 그리고 폐기물 분야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

1) 스코프 3(기타 간접배출)는 스코프 2의 간접 배출원을 제외한 그 밖의 간접 배출원으로, 사업장 경계(조직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함. 종업원 출퇴근 및 출장, 프랜차이즈, 구매된 원재료 또는 1차 재료 생산 등과 같은 경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스코프 3에 해당함.

현을 위한 규제의 강화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의 영향이 전망됨.

- 산업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많은 시멘트, 철강산업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강화에 따라 원가 상승이나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건물의 온실가스와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영향은 국내 건설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중동국가의 탄소중립정책 강화 움직임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에서의 계약 및 시공과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국토교통부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2021년 12월 발표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할 전망이고, 이에 따른 건설산업 내 다양한 환경 리스크가 부각될 것임.
-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2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개발, 도시개발, 도로 건설 등 10대 분야의 기후변화영향평가[2]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건설 전반의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임.

◎ 정부의 사회 분야 관련 제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설산업에서 사회 분야의 여러 이슈가 건설 영업, 생산 등 전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인권,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 등 주요한 ESG의 사회 분야 이슈들이 2023년 ESG의 핵심 키워드로서 부상할 전망임.
- 해외 각국의 기업 인권 실사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제화 및 의무화 움직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전망임. 특히,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의식이 강한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과 같은 이슈는 더욱 크게 부상할 것임.
- 산업안전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안전 문제는 ESG 이슈의 증대와 함께 더욱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산업안전 이슈의 지속적인 확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쳐 건설기업, 발주자, 협력업체 등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임.
- 최근 ESG의 여러 이슈 중에서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공급망 관리임.
- 건설산업에선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생산에 참여하는 원도급업체는 물론, 협력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의 관리 책임과 역할, 성과에 관한 관심이 커질 전망임. 건설산업 내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 문화 확산과 협력업체의 ESG 성과의 관리 등에 대한 이슈도 성장할 것임.

2)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도입됐으며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 평가대상은 △ 에너지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 도시개발, △ 수자원 개발, △ 항만 건설, △ 산지 개발,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도로 건설, △ 공항 건설, △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10개 분야임.

〈그림 5〉 2023년 건설산업 ESG 관련 주요 이슈

김영덕(선임연구위원·ydkim@cerik.re.kr)